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17.(화) 11:30	배포 일시	2023. 1. 17.(화) 09:3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정책국	책임자	과 장	오기남 (044-215-5720)
	재정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신채용 (shinchy@korea.kr)
담당 부서	재정관리국	책임자	과 장	김위정 (044-215-5310)
	재정관리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강성빈 (a0009876@korea.kr)

2023년 재정정책은 4가지 큰 틀* 하에 운용, 본격적인 국정성과 창출에 재정역량 총집중

※ ①건전재정기조 착근, ②재정혁신 가속화, ③민생·경기 어려움 극복 지원,
④재정비전 2050 확정·본격 추진

-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-

□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.17(화) 10:00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「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」를 주재하였음

- 금번 위원회는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작년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·논의하고, 지난 국무회의('23.1.3)를 통해 보고된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 성과관리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

<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요 >

- ▶ 일시/장소 : 2023. 1. 17(화) 10:00~12:00 / 서울 무역보험공사
- ▶ 참석자 : (정부) 기재부 제2차관, 재정관리관, 재정정책국장, 예산총괄심의관
교육부·과기부·국방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고용부·국토부 실국장 등
(민간) KDI·조세연 등 민간위원·외부전문가 10여명 등

1. 2022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재정정책방향

[2022년 재정운용 성과]

- '22년은 그간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, 민간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패러다임을 재정립했던 한 해였음

- ❶ 건전재정기조 하에 '23년 예산, '22~'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·수립하여 연간 100조원 내외로 고착화된 재정수지 적자를 절반 수준 축소하고,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정상계도로 안정화시키는 등 그간 우려가 높았던 우리 재정건전성을 바로 세우는 것에 방점을 둠

* 관리수지(조원) : ('09~'18)△22.7 ('19)△54.4 ('20~'22)△104.4 ('23)△58.2

* 국가채무비율(GDP대비%) : ('09)29.8 ('13)32.6 ('17)36.0 ('22^{본예산})50.0 ('23)50.4

- 특히, 24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지출재구조화 등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지난 5년 평균(8.7%) 대비 대폭 하향 조정한 5.1%로 '23년 예산 편성

* 총지출 증가율(% 본예산 기준) : ('09~'13)5.9 ('14~'17)4.0 ('18~'22)8.7 ('23)5.1

- ❷ 코로나 극복, 고물가 대응, 서민약자 지원 등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수행

- '22년에는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, 에너지바우처,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물가·민생안정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집행관리에 총력

- 또한, '23년 예산에 부모급여, 병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재정소요*를 충분히 반영하고, 저소득층, 노인·장애인·취약청년 등 약자복지를 촘촘히 보강

* (부모급여) 만 0~1세 아동 월 35~70만원 부모급여 신설('23년 +1.3조원)
(병 봉급 인상) '22년 82 → '23년 130만원으로 인상('23년 +1.0조원) 등

-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및 인재양성, 원자력 생태계 복원, 핵심 전략기술 R&D 등 미래대비 투자에도 만전

* '23년 투자금액(조원): (반도체 경쟁력 확보)1.1 (원전생태계 강화)0.7 (혁신인재 양성)2.1 등

- ❸ 재정만능주의 탈피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과 함께 그간 비효율적인 재정칸막이로 지적되어 온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·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*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하였음

* 총 9.7조원 = 기존사업 이관 8조원 + 추가증액 1.7조원(교육세 활용 1.5조원 + 일반회계 0.2조원)

-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, 예타제도 개편,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 등 전방위적 재정제도 개혁 노력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
[향후 재정정책방향]

-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, 저성장·고물가 등 민생·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, 인구·기후위기,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·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,
- 향후 재정은 4가지 큰 틀(❶건전재정기조 착근, ❷재정혁신 가속화 ❸당면한 민생·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, ❹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·본격 추진) 하에 운용할 계획임을 밝힘

❶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순위는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 공고화임

- 저성과·유사·중복사업 구조조정, 의무·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,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(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) 구축에 총력

❷ 둘째, 재정혁신에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

- 예타제도 효율화(국가재정법)·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(국유재산법)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지속하면서,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및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

❸ 셋째, 당면한 민생·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 만전

- 금년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, 상반기 중 재정*·공공투자·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 투입

* (중앙재정)155.8조원<65.0%> (지방재정)131.3<60.5%> (지방교육)16.5<65.0%>

-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, 민생안정 등 민생·경기과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·점검

* (일자리) 관리대상 사업예산 14.9조원 중 상반기 10.4조원(70%) 이상 집행
(민생안정) 연간 11.2조원 맞춤형 집행 관리하고, 1/4분기 중 4.0조원(35.6%) 집행
(SOC)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(GTX), 주요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행 가속화 추진

❹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금년 상반기에 확정 및 본격 추진할 「재정비전 2050」 작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

- 「재정비전 2050」은 국가재정전략회의('22.7.7, 대통령 주재)에서 수립하기로 결정되어 비상경제장관회의(10.28, 부총리) 등에서 추진계획 등을 수차례 논의한 바 있음
- 관계부처 협의, 전문가·일반국민·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며,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임

2.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 성과관리 추진계획

[추진 배경]

-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「12대 핵심재정사업(군) 성과관리 추진계획」을 수립
 - * 「'22~'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」('22.8), 「'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」('23.1) 국무회의 보고
-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에 대해 재정당국과 사업 소관부처가 집행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

[주요 내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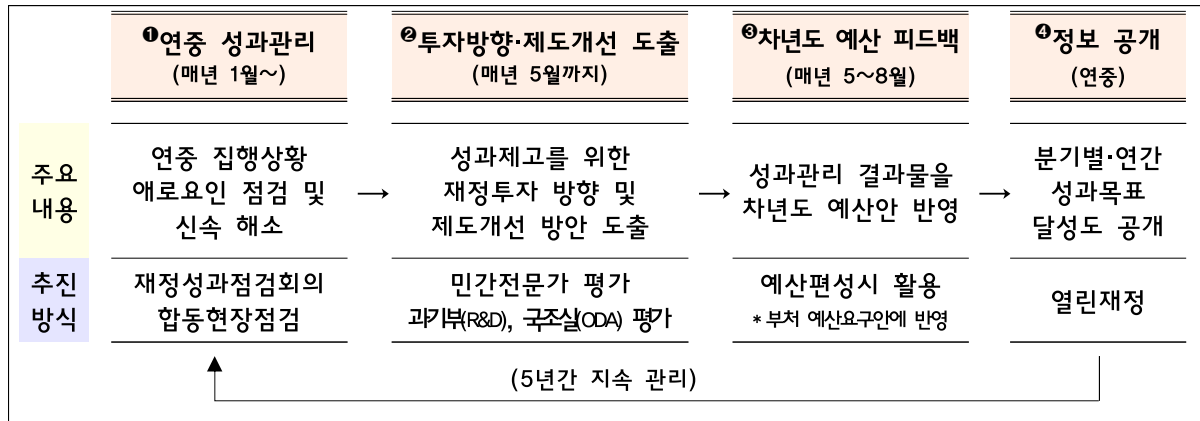
- 국정과제, 경제정책방향, '23년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3대 분야,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 선정('23년 예산 기준 12.3조원 규모)
- 원칙적으로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을 5년간('23~'27년) 지속 관리하되, 향후 경제여건, 관리실익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관리대상 제외 및 신규사업 추가

[3대 분야,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]

- 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: ❶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, ❷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, ❸청년 자산형성·주거·일자리 지원, ❹생활물가 안정 지원, ❺지역균형발전
- ②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: ❶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, ❷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, ❸공급망 대응, ❹중소·벤처·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- ③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 : ❶재난·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, ❷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, ❸국격·외교 역량 강화

-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에 대해 ❶재정성과점검회의·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연중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, ❷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재정투자 방향·제도 개선방안 도출 예정

- 또한, ③이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, ④성과목표 달성도 등 주요 성과 정보를 ‘열린재정’ 누리집(www.openfiscaldata.go.kr)을 통해 대국민 공개할 계획임



- 이를 위해, 12대 핵심재정사업(군)별 해당분야 민간전문가, 기재부, 소관 부처로 ‘전담 성과관리팀’을 구성하고, 외부 자문단을 통해 성과관리·평가 방향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계획

[향후 계획]

- 최 차관은 핵심재정사업(군)별 성과관리팀 구성(1월) 및 착수회의(2월), 성과지표·목표 설정(2월), 재정성과점검회의(수시) 등 향후 성과관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니,
- 사업 소관부처에서 결과지향적인 성과지표·목표를 제시하고, 적시성 있는 애로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
- 또한, 금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계기에 핵심재정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,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'24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
- 마지막으로, 최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
- 앞으로도 노동·교육·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할 것임을 밝힘

참 고

12대 핵심재정사업(군)별 수혜 계층 · 그룹

[12대 핵심재정사업(군)]

[수혜 계층 · 그룹]

1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■ 취약근로자(예술인·특고 등)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	→	서민 ·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	■ 저소득 근로자(월 260만원 이하), 예술인, 특고
2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■ 장애인 돌봄(발달장애인, 장애인활동지원)			■ 장애인
3 청년 자산형성·주거·일자리 지원 ■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(청년도약계좌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)			■ 청년(만19세~34세)
4 생활물가 안정 지원 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			■ 일반 국민 + 농어민
5 지역 균형 발전 ■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(RIS)			■ 학생 + 지방 대학 + 지역 거점 기업
6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■ 반도체 인력양성·기술개발·사업화 지원 (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, 차세대반도체 R&D, AI반도체 사업화지원)	→	기업 · 소상공인 등 경제활동 주요주체	■ 대학 + 기업 + 인력
7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■ 차세대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개발			■ 기업 + 인력
8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■ 공급망 핵심품목생산기반 구축 강화 (유턴기업, 외투기업 지원)			■ 유턴기업 + 외투기업
9 중소벤처,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■ 창업성장기술개발(TIPS) 및 민관협력창업육성			■ 중소벤처 기업 + 창업희망자
10 재난·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■ 산불 대응능력 강화	→	관련 직역 (군인 등) + 일반국민	■ 일반 국민
11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■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(병 봉급, 급식, 숙소, 사회진출지원금)			■ 군인 장병
12 국격 · 외교 역량 강화 ■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			■ 일반 국민 + 기후변화 관련 기업